

다문화인권교육을 통한 증오범죄 대응방안: 프랑스의 이민 2,3세의 증오범죄 사례 중심으로*



정은정

제1저자 동아대학교
(eunch72@naver.com)



김대중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daejungkim@dau.ac.kr)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이민사회가 정착된 유럽의 증오범죄 사례를 통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인권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오범죄는 일반범죄보다 피해의 정도가 크고 회복기간 또한 길다.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사회도 증오범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 이민배경 2,3세에 의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나게 했다. 평등에 집착한 프랑스식 다문화주의는 이민자를 경제적 소외계층으로 만들었고 마그레브 국가를 향한 식민지 프레임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게 했다. 범죄자 대다수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에 집중된 보도는 '이슬람포비아'를 생성했다. 이민자와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은 탈정치이념의 시민윤리가 실천될 수 있는 인권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민자들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사회를 향한 분노를 가지지 않을 때 증오범죄는 예방될 것이다.

주제어 : 증오범죄, 다문화인권교육, 다문화정책, 인권, 차별과 편견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지구라는 물리적 공간은 세계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생물로 진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국가 간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고유문화 수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된 오늘날은 다양한 인종, 종교, 이념의 충돌을 피해갈 수 없으며 이민 사회의 통합을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국가의 정책이 개인의 이념과 자유를 외면하더라도 국민은 국가를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다. 국가의 정책과 사회 환경은 모두에게 안락함을 제공할 수 없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개인과 집단은 테리라는 증오범죄의 형태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범죄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공포와 불안으로 인해 유럽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테러리즘은 정치학, 경제학, 종교학, 심리학 및 미디어와 과학기술의 '메가 컨셉션'(mega conception)으로 볼 수 있으며 거대 문명의 '문명 콤플렉스'와 '실패한 근대화'라는 패배주의에서 나타난 야만적 폭력현상이다. 문명 간 충돌로 인해 '자기 파괴'를 행하는 것으로 문명 간 충분한 답론이 테러리즘의 종식을 가져올 수 있다(윤민우 2016). 또한 메가테러리즘¹⁾은 지구화 현상으로 인한 경제 불평등, 사회적 균열, 문화적 획일화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등장한 종교적 근본주의 회귀로 인해 발생한다. 메가테러리즘을 촉발하는 종교적 근본주의는 '적'이 존재하고 '적'에 대한 승리로 종교적 구원을 얻고자 하기에 투쟁, 순교로 이어질 수 있다(구춘권 2005). 이슬람 근본주의는 반(反)서구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식민세력에 대한 과거 역사에서 이어진 현재의 투쟁이라 볼 수 있다.

테리는 단순한 범죄사건이 아니며 사건의 동기와 해결과정에서 인종, 종교, 국제관계 등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증오범죄를 대응하는 방안은 사건 이후 처벌이 주요하며 그 예로 중형주의(Severe Punishment Principle)를 들 수 있다. 중형주의는 '형벌의 강화 현상'으로 강벌주의(Punitivism)라고도하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벌의 포퓰리즘(Penal Populism), 형벌의 정치화(Politisierung des Strafrechts) 등으로 명명하기도 한다(안나현 2016). 이는 간편한 대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강한 법으로 구성원을 견제하고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테러리즘으로 이어지는 증오범죄 혹은 편견과 차별로 인한 범죄는 인식변화가 핵심이며 정책적 차원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1) 인명피해가 테러작전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최대한의 인명희생을 목표로 설정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로부터 자립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을 말한다(Muller 2003, 구춘권 2005 재인용).

테러리즘으로 확산되고 있는 증오범죄는 사회 안전과 다문화사회의 인종, 종교 등의 조화의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 다양한 편견 요소로 인한 차별을 막는 것이 우선이며, 이는 캠페인과 교육을 통한 '다름'에 대한 인식변화가 중요하다(이정주 2013).

김진희(2014)는 다문화정책의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 프랑스 등이 오늘날 겪고 있는 다문화주의 갈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갈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교육의 방향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 실패론 선언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문화정책 회의론은 반(反)이민주의 정책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국가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동화와 통합, 타자화라는 측면에서 갈등을 촉발하고 있어 다문화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진희 2014).

2005년 프랑스 '방리유 소요사태'와 같이 이주민과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갈등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한다.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은 공화주의적 동화 모델의 기초를 유지하며 다문화적 인식과 시민 윤리의 결여로 문화갈등을 안고 있기에 다문화와 동화를 시민 윤리적으로 수용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장정애 2008).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집착이 다문화 사회통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정주하고자하는 이주민을 주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이민자에게 차별과 소외감을 갖게 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한국사회 또한 이민배경 2,3세의 증오범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 프랑스의 증오범죄는 이주민 1세대보다 자녀세대에서 범죄율이 높아진다. 이주민이 증가하고 자녀세대가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도 범죄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문화교육을 통한 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정도희 2017).

국민과 사회에 차별 의식이 남아 있다면 혐오범죄(hate crime)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교육과 함께 소수집단의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보장에 목적을 둔 시민단체와 민간부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인권교육은 차별로 인한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다(김수원 2009).

증오범죄와 관련한 앞선 연구는 증오범죄 발생에 따른 형사적 대응방안과 이슬람 종교 갈등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리즘으로 이어지고 있는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증오범죄의 용의자 대다수가 이민 배경 2,3세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들이 이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국가에 테러라는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원인을 이민사회의 '차별과 배제'에서 오는 소외감으로 보았다. 이민 2,3세의 성장과정에서 사회로부터 경험하는 소외감을 줄일 수 있다면 증오범죄의 발생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증오범죄 대응방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희생을 동반하는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증오범죄라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의 필수 요소로 교육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질화된 문화의 수용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보편적 시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으로 자리 잡아야할 것이다.

II. 증오범죄 이론과 프랑스 증오범죄 사례

1. 증오범죄의 개념과 원인

증오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으로 ‘아주 사무치게 미워하는 것’이며 테러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감정이 표출될 때 나타난다. 증오범죄의 피해는 일반적인 범죄 피해보다 심리적 충격이 심각하여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사후(事後)에 그 증상이 악화된다. 회복기간 또한 적어도 5년 이상이 소요되어 일반범죄 피해자의 약 2배 이상이 걸린다(M. G. Herek et al 1997). 또한 ‘불특정한 사람’에 의한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증오범죄의 증가는 피해자를 사적 혼란과 공황 상태로 만들 수 있다(양문승 외 2008).

미국은 ‘증오범죄방지법’²⁾ 제정으로 증오범죄를 별도의 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증오범죄의 성립여부는 편견과의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판단하는데 첫째는 증오범죄의 확실한 성립조건으로 편견이 심하고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둘째는 편견이 심하고 인과관계가 경한 경우로 편견과 범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증오범죄로 볼 수 있다. 셋째는 편견의 정도가 약하고 인과관계가 긴밀한 경우로 대부분의 증오범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넷째는 편견의 정도가 강하고 인과관계의 입증이 약한 경우로 사건의 상황에 따라 증오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진다. 이처럼 까다롭게 성립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증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기 때문이다(James B. Jacobs 외 1997).

미국의 증오범죄 개념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면, 인종, 종교, 피부색, 나이, 장애, 성적 지향, 출생지, 결혼 상태,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갖는 ‘일차 편견에 의한 범죄’와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 피해자가 증오의 감정으로 행하는 ‘이차편견에 의한 범죄’로 정의할 수 있다. 증오범죄는 개인적 원인과 가정적 원인, 사회적 원인으로 나타나며 자기혐오와 삶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고 이 감정이 ‘증오’의 이차적 감정으로 전이되었을 때 해소되지

2) 미국은 인종차별로 인한 폭력성을 방지하기 위해 1968년 ‘증오범죄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09년에는 증오의 범위를 종교, 신체, 정신적 장애, 성적체성, 성적 취향을 포함하는 법안으로 개정하였다.

못한 감정이 외부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양문승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여러 원인 중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증오범죄의 발생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 문화적 측면의 원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는 사회적 불평등이다.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교육기회의 불평등,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불평등이 있다. 둘째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다. 미국이 편견의 정도에 따라 증오범죄를 규정하는 것에 나타나 있듯이 편견은 증오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는 대중 매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폭력성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증오범죄 소재 영화는 수용자인 대중에게 증오범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김혜정 외 2013).

또한 증오범죄의 피의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사회를 향해 공격행동을 하는 원인으로 신체활동의 어려움, 직업상실, 경제적 어려움, 사회활동과 대인관계가 위축된 상황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효과를 들 수 있다(박순진 2003). 무엇보다 사회관계망에서 고립된 개인은 사회와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없어 부정적 감정의 적재현상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민배경 2, 3세에 의한 증오범죄

2005년 프랑스 방리유(Banlieue)에서는 아프리카 이민 2세 청소년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다 감전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사회로부터 억압받고 소외받던 이주 배경 청년들의 폭동으로 이어지고 주변 지역까지 소요가 확산되었다. 프랑스 경찰은 소요사태로 인해 2명의 이주 배경 청년이 사망하고 3000명의 시위자가 체포되었으며, 2억 유로의 재산상 피해가 났다고 발표했다. 방리유의 소요사태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사회 혼란을 야기하였다. 거리의 상점과 자동차가 불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소요사태를 접한 프랑스 정주민은 이주민에 대한 공포와 부정적 감정이 더욱 강해졌다. 이로 인해 이주민을 향한 정주민의 공포와 불만이 증폭되어 이분화된 사회갈등이 가속화되었다.

프랑스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민 배경 2,3세의 증오범죄는 방리유 사건 전후에도 수차례 발생하였다.

〈표 1〉의 이민 배경 2, 3세의 프랑스 내 증오범죄(폭동)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 1월 7일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에서 발생한 범죄용의자 3명 모두 프랑스 국적으로 알제리 이민자 2세이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타종교의 존중’에 대한 논쟁을 가져왔다. 이민 1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차별을 견뎌냈지만, 태어날 때부터 국민인 이민 2, 3세대들은 국민 대접이 아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자랄 경우 분노와 좌절이 커질 수 있다.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상대가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공존이라

말하는 것에 대해 온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신문 15/01/08).

2012년 아미앵에서 발생한 이민 청년들의 폭동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청년의 사망이 촉발원인이 되어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며 150여 명의 청년들이 도심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저항했다. 당시 아미앵은 프랑스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12%를 넘었고,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은 23.3%에 달했다. 아미앵 북부지역은 가난한 이민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정부에서 관심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원 대상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프레시안 12/08/16).

2005년 방리유 사태를 비롯한 소요들은 차별받고 억압받은 이민 2세 청년들의 한 단계 증폭된 저항이다. 이러한 소요는 끝나지 않은 투쟁이며 단순히 치안 강화로만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이기라 외 2007). 주변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이민 2세에게는 시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정부 대응 방안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정주민의 편에 서있는 불공정한 대처로 여겨질 수 있고 또 다른 증오범죄 발생의 트리거(Trigger)로 작용할 수 있다.

〈표 1〉 이민 배경 2,3세의 프랑스 내 증오범죄(폭동) 발생 현황

날짜	도시	촉발요인	피해상황
2005년 10월27일	방리유	아프리카계 이민 2세 청년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려다 감전사한 사건에 불만을 가진 이민 청년들이 폭동을 일으킴	이민배경 청년 2명 사망, 3000명의 시위자 체포, 2억 유로의 재산상 피해
2012년 8월13일	아미앵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이민배경 청년의 사망으로 분노한 북아프리카계 이민 2세가 폭동을 일으킴. 높은 실업률도 중요한 원인이 됨.	경찰 16명 부상, 학교와 공공건물이 불에 탐. 600만유로 재산피해
2015년 11월13일	파리 (동시다발)	벨기에 태생 프랑스인, 튀니지 태생 프랑스인, 프랑스인 등 IS 추정 범죄	130여명 사망, 300여명의 부상자 발생
2015년 1월7일	파리	튀니지계, 알제리계 이민 2세 청년, 샤를리 에브도의 이슬람 풍자에 불만을 품고 총기난사	12명 사망, 11명 부상
2016년 7월14일	니스	튀니지계 프랑스 국적 이민자, IS 추정 범죄	84명 사망
2018년 5월12일	몽시니가	체첸공화국 출신 프랑스국적 청년, 도심 흥기난동, IS 추정 범죄	1명 사망, 4명 부상

※ 문헌정보와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한 것으로 프랑스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중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범죄는 제외됨.

Ⅲ. 프랑스 증오범죄가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주는 시사점

미국과 캐나다는 출범초기부터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문화사회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변화한 경우이다. 다문화사회는 타문화와 타민족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한국과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다문화사회로 변화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타문화와의 갈등은 상호 이해 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받은 집단의 사회 불만의 표출로 발생하게 된다. 우리 사회도 프랑스의 증오범죄와 같은 억압되고 소외된 집단의 공격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표 2〉는 전문가 집단 설문을 통해 국내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가진 우리 사회는 북한의 위협을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고 이어서 사회 불만세력, 급진주의 세력의 테러와 이슬람 인구, 외국인 체류자,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위협을 요인으로 선택했다. 최근 국내 이슬람 인구는 전체 인구의 0.3% 인 15만 명으로 소수이지만 이슬람교는 나쁜 종교이며 테러리즘 발생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상당수 있다(한국일보 19/03/26). 한편 1위로 나타난 북한의 위협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타 요인에 비해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다른 요인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어떤 요인이든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증오범죄는 국민안보를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표 2〉 국내 테러위험요인 우선순위 분석결과

	평가항목	중요도(가중치)	순위
국내테러 위험요인	북한의 위협	0.364	1
	사회 불만세력	0.188	2
	급진주의세력	0.166	3
	이슬람 인구	0.096	4
	외국인체류자	0.093	5
	북한이탈주민	0.092	6
	일관성 비율		.02

출처: 전용재 외(2017).

프랑스의 증오범죄를 통해 급변하는 한국 다문화사회가 주목해야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소외 계층

프랑스는 근대화 과정에서 저출산 현상과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와 경제공황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노동이민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전체인구 6560만 명 중 1/6에 해당하는 총 1,150만 명이 이민자이다.³⁾ 16세기 후부터 숙지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사회풍토를 가지고 있으며 나치즘의 인종우월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 대혁명의 역사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존중하게 하였다. 이는 정주민과 이주민의 구분을 두지 않는 프랑스식 동화주의로 발전하게 하였으며 이주민은 프랑스 정부와 ‘이민 계약’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신규 이민자와는 계약 (Contrat d'accueil et integration)을 체결하여 프랑스 국민으로 사회 통합을 강제하고 있다.

이주민이 갖는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하는 이주민은 사회경제적으로 낙오자가 되고 주류 사회에 밀려나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 사회적으로 기준이 미달하는 지역 751개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류사회에서 밀려나 도시 외곽으로 자리 잡은 이주민 거주 지역이다. 저개발 지역 선정에서 이민자 거주지역을 선택한 것은 아니나 선정 후 이민자 비율이 높은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이지역 인구의 증가는 이주민이 게토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⁴⁾ 2005년 프랑스 방리유 소요사태 또한 파리 외곽 이민자 거주 지역인 방리유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아울러 저개발 지역의 이주민은 자녀 교육에 열의가 부족하여 학력 저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빈곤의 되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⁵⁾

우리나라 교육부의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전체학생

3) 출처: <http://overseas.mofa.go.kr/fr-ko/index.do> (검색일: 2019. 04. 15.).

5백만명이 이민자이며 이 중 2백 만명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민자 자녀가 650만 명으로 숙지주의 원칙에 따라 모두 프랑스 국적자이다. 2012.5.23.(수) 프랑스 고등통합위원회(Haut Conseil a l'integration) 사무총장 면담 시 동인 발언 요지

4) 저개발지역의 주요 특징은 이민자 자녀수가 많다는 것인데, 예로 Seine Saint Denis 지역의 경우 거주자가 60%가 이민자이다.

5) 출처: <http://overseas.mofa.go.kr/fr-ko/index.do> (검색일: 2019. 04. 15.).

주프랑스 대한민국 영사관검색자료-2012.5.23.(수) 프랑스 고등통합위원회(Haut Conseil a l'integration) 사무총장 면담 시 동인 발언 요지

수는 약 18만 명 감소하였고 이 감소세는 저출산으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18년에는 12만 명을 초과하여 전체 학생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7년도 기준 1.17%로 전체학생의 학업중단율인 0.87%보다 높게 나타났다⁶⁾.

낮은 학력은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 부적응과 사회에 대한 불만 또한 높아지게 한다. 경제적 빈곤은 거주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 과거 구로공단 지역의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가리봉동에서 대림동 일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이 일대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⁷⁾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의 한 예로서 몇 년 전 개봉한 '청년경찰'이라는 영화에서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지역인 대림동은 인신매매, 장기적출 등 범죄를 일삼는 집단이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묘사되었다. 한국계 중국인 단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공포와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이유로 영화사측에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한국계 중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다.

2. 약소국에 대한 편견

2012년 이후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용의자들의 대다수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이민자 2세대였으며,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말리 등 과거 프랑스 식민지이거나 보호령 지역 출신이었다(오창룡 2017). 이들은 방리유와 같은 이주민 밀집지역에 거주하며 일상의 차별 속에서 식민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프랑스와 알제리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였다. 하지만 1830년 알제리를 식민화하면서 프랑스인들은 자신들과 종교 문화가 다른 이슬람을 믿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알제리 내에서 일어난 전쟁은 알제리 농촌과 공업기반을 황폐화시켰는데 일자리를 잃은 알제리인은 식민지 모국 프랑스로 이주하였다. 이후 1962년 알제리 독립 후 프랑스에서는 알제리인의 이주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민 배경 2, 3세는 이민자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통합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데, 그들은 '우리들은 이민을 온 것이 아닌데도 여전히 통합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우리는

6) 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76953> (검색일: 2019. 04. 15.) 교육부.

7) 행정안전부 2017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의하면 전체 지역 주민 중 영등포구는 13.8%, 안산시 단원구는 17.7%가 외국인 주민으로 나타났다.

이미 사회의 일부다' 라고 주장하였다(김현주 2015).

프랑스 식민지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프랑스 정주민은 지배와 피지배의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서양과 동양(orient)으로 이분화하고 이질성을 나약함으로 몰아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오리엔탈리즘은 프랑스, 영국 등 지배국가 국민의 관점 뿐 아니라 식민지국가 국민의 관점마저도 지배하였다. 상위문화와 하위문화로 구성된 틀 속에서 머물며 식민지 국가의 구조적 모순을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국 사회는 서양문화의 영향권 아래 서양이 씌워준 오리엔트(orient) 안에서 또 다른 오리엔트를 만들어 냈으며 그것은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편견으로 나타난다. 동남아시아권에서 우리 사회로 유입된 이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한 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이 대다수이며 우리보다 '나약한' 국가라는 무시로부터 시작한 '편견과 차별'은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3. 종교 갈등

프랑스는 종교전쟁을 겪은 국가로 종교 간 평등을 인정하는 정교분리(Laicite)⁸⁾ 정책 기초를 가진 나라로 가톨릭 국가 중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에 있는 이슬람 사원수가 2천여 개이고 병원과 군대에도 이슬람 사제가 있다. 무슬림 인구의 증가가 반드시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률 증가와 취업난, 반(反)이민정당의 득세,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의 증가와 같은 요인과 결합한다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황기식 외 2015). 프랑스는 종교간 평등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나 이슬람 근본주의를 상징하는 표식이나 행동을 하였을 때는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 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평등과 통합이 중요한 정치철학으로 개인의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여 부르카 사용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고 본다. 학교에서 부르카 사용을 금지하거나 무슬림 여학생이 수영 시간에 남녀 합반을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제재함에 따라 이슬람교도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테러라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빈민층과 부유층의 거주 지역이 구분되고 사회적, 인종적 차별이 고질화되는 것에 불만을 느낀 젊은이들이 테러 집단에 가담하기도 한다. 2015년 파리 테러들의 주범들은 거의 모두가 프랑스의 도시 빈민촌 출신이다.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모험과 이례적인 전율을 찾기에 IS는 육체투자만을 요구하므로 유혹적일 수밖에 없었다(최인숙 2016).

8) 1905년 제정된 라이시테법은 '사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자리를 엄격히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프랑스 헌법 제 1조에도 포함되어 있다.

테러로 인한 증오범죄가 발생하면 무슬림에 의한 범죄로 언론 보도가 되며 이는 범죄 발생국가인 프랑스 뿐 아니라 전세계에 ‘이슬람포비아’라는 극단적이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대하는 대중의 인식에도 ‘이슬람포비아’가 작용하여 무조건적인 난민 수용 거부를 주장하기도 했다.

IV. 증오범죄 대응방안으로서의 다문화교육 방향 성찰

증오범죄의 여러 원인 중 사회적 원인으로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 대중매체의 영향이 있었다. 이 중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불평등한 사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대중매체 또한 이러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창구로 만들 것이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이민배경 2,3세가 사회로부터 받은 차별과 편견이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증오심으로 전환될 때 증오범죄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배경 2,3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의 방법으로 다문화인권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문화 인권교육은 차별과 편견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본질적으로 시민권과 시민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정상우 2017).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인식 등 다문화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다문화인권교육은 다양성의 다문화교육과 모두가 존엄한 인간으로 동등하게 처우 받는 보편적 특성을 교육하는 인권교육이 결합된 것이다(나달숙 2014). 인권교육 없이 문화다양성의 강조만 교육된다면 이주민과 정주민 모두 자기 국가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관적 해석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이민자, 이민배경 2,3세와 정주민, 이주민과 또 다른 이주민 간의 민족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5년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교육을 통해 얻은 인권 지식이 차별가해 경험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했다. 인권교육은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존중되고 남도 존중하는 상호 신뢰감이 사회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정명진 2012). 청소년들이 일상의 차별과 폭력에 대해 감수성을 키우고 인권 침해 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에 대해 지각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인권교육이다(이상애 외 2009).

이민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이민자 자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증오범죄는 어린 시절부터 받아들인 차별과 편견에 의한 소외감이 원인이 되고 있다. 문화다양성을 수용하고 모든

인간의 존중받는 보편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인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증오범죄를 예방하는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1. 보편적 인류의 가치, 다문화 인권교육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2018년 12월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인종차별 증오 표현에 대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⁹⁾ 한국 사회도 외국인 체류 인구가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종차별에 관한 법령 제정을 통해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시민으로의 윤리 의식을 갖추기 위한 다문화교육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인간에 대한 존엄을 중시하는 교육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베넷(Bennett)은 다문화교육의 네 가지 핵심적 가치를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세계공동체에 대한 책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에 두었으며 이는 다문화교육에 철학적 기초가 된다(Christine I. Bennett 2009). 네 가지 핵심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가치가 기저에 존재할 때 나머지 세 가지 가치 또한 실천 가능한 내용이다.

세계화의 진행으로 환경, 난민 문제, 자연재해나 질병 등 단일 국민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어나면서 ‘인권’이라는 초국적 어젠다에 주목하고 있다(김수경 2015). 인권은 고대 철학의 자유론, 그리이스, 스토아학파나 기독교의 인간학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프랑스혁명 선언으로 인권의 분류화가 구체적으로 시도되었고, 그 후 역사적인 발전과 더불어 자유권, 기본권, 자연권, 시민권으로 강조점이 달라져 왔다(김용대 2004). 프랑스공화국의 기본 이념은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1789년에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에 대한 내용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기초한다. 제 1조에 명시된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 한다’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1791년 프랑스 헌법의 전문으로 채택되었고 세계 각국의 헌법과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세계인권선언문’ 제정으로 이어졌다.

전지구화 현상은 국경을 넘는 이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주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방인으로 남아 있으며 국적을 취득하고 시민의 권리를 얻게 되더라도 출신

9) 위원회는 이날 국가별 심의 보고서에서 2012년에도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입법을 촉구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에 따른 편견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기도 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주류와 비주류, 이주민과 정주민, 부유층과 빈곤층과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체득할 수 있는 계층 간의 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사회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국제 인권 레짐의 등장은 국민국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적과 영토에 근거한 정의에서 벗어난 시민권이 인류 보편의 권리로 규정된다. 따라서 시민권의 경계는 민족국가를 초월한 '탈민족적 시민권(postnational citizenship)'으로 영향력을 이동하게 한다(김수경 2015).

국민국가의 경계가 확장된 유럽연합에 속한 여러 국가는 유럽 의회에서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다문화교육에 근거한 가치 전달과 차이의 극복을 위한 인권교육을 일반화하였다.

인권이 다문화교육에서 갖는 의미는 인권에서 다루고 있는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 불평등의 문제들이 다양성과 공존의 문제를 추구하는 다문화교육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김수경 2015). 다문화교육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을 한다면 오히려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여성성기의 일부를 절제하는 '할레'와 집안의 명예를 위해 순결을 잃은 여성을 살해하는 '명예살인'과 같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논쟁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다양성의 수용과정에서 인권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의 명확한 판단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 또한 인권과 다문화교육의 주요 과제이다. 소득 불평등으로 시작되는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박탈, 갑질, 위화감 등으로 하위 계층을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한다. 차별과 배제로 인한 소외감이 분노가 되어 범죄를 일으킬 정도로 고통 받는 이민 배경 2,3세의 이민 사회 적응을 위해 다문화교육의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2. 시민 사회 주도의 다문화인권교육

이민자에 의한 증오범죄의 사회 심리적 요인인 차별과 배제에서 오는 소외감을 감소하게 하는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인권교육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그 방향은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인권교육'이 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교육 등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관주도형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교육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개선이 자발적이라기보다 의무감이 우선되어 피교육자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또한 관이 주도하여 다문화가족에게 시혜적인 정책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반(反)다문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위에서부터의 교육 방침과 콘텐츠는 ‘교육의 전달’에 그칠 수 있다.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아래로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교육 참여자와 연대하여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후 피드백을 통한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주도해줄 시민단체의 역할이 요구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 단체가 이민 배경 2, 3세와 함께 이민사회에서의 어려움과 불만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민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이며 자신의 힘으로 달라질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분노의 적재로 증오가 일어나는 과정을 막을 수 있고, 당당한 시민의 자리를 차지한 이주민을 바라보는 정주민의 시선 또한 차별에서 다양성의 인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자를 위한 인권교육은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 이는 분노를 억누르지 않게 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소수자인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 위주에서 최근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수자 교육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다문화 학생이 분리된 교육을 받을 경우 낙인효과¹⁰⁾로 인해 오히려 교육을 통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학생과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자 즉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자신들이 처한 환경으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인권교육이 진행되어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이민배경 2, 3세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가정에서의 인권침해, 정체성 확립,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등은 별도의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요구하고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인권교육은 소수를 위한 교육과 다수를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분리교육이 아닌 선택에 의한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교의 다문화인권교육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교육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수 과정이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를 교육소외계층으로 보고 교육복지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접근하여 다문화교육이 동화주의 성격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강현민 외 2015).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¹¹⁾가 설립되고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지만 다문화교

10)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는 경제적 빈곤층, ‘우리와 다른’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육과 인권교육의 요소가 결합된 다문화인권교육은 2010년부터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문화인권교육은 '다문화교육을 인권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라는 견해와 '다문화교육의 본질에 인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다문화인권교육은 다문화교육에 인권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하고 있다(나달숙 2017).

2018년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¹²⁾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2015년, 2018년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령별 조사에서 20대의 다문화수용성이 2015년 조사보다 8개 요소¹³⁾가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고정관념 및 차별에서 5.27점이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다문화교육이 학교에서 실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반 시민이 접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은 4.6%이며 청소년의 경우 32.4%가 다문화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교육의 기회가 일반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20대는 한국 다문화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로 교육의 기회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용 또한 지침에 가까웠으며 온정적이고 시혜적 관점의 교육이 많았다. 다문화교육이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민배경 2, 3세가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가 시작되는 공간은 학교이며 다문화교육이 실천되는 공간 또한 학교이다. 소외감은 이민자 자녀에게 국한된 감정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상처받는 감정이다. 증오범죄는 이민 배경 2, 3세만이 아니라 소외계층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외감을 학교의 또래문화에서부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의 관점을 넘어 '모든 사람'으로 시각을 확장하고 다문화인권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오로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산물(Hunt Lynn 2009)로 인간과 사회현상에 대한 끊임없는 사고(思考)를 통해 자각(自覺)해내야 한다. 아울러 다문화인권교육은 인권의 대한 자각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을 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12) 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13) 다양성(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일방적 동화기대, 거부, 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보편성(이중적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4. 탈정치 이념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

유럽 사회 내 이민자 문제는 정주민과 이주민 간의 문화적, 종교적 갈등으로 표출되면서 반(反)이민 정서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선거에서 약진함에 따라 이민자 문제는 ‘정치화’ 되었다(황기식 외 2016).

2000년대부터 유럽에서는 극우정당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났고 집권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다. 극우정당 지지율이 각국의 이민자비율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자비율이 높은 프랑스는 극우정당의 지지율의 약진이 뚜렷하여 프랑스 내 반(反)이민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으로 실업률이 증가한 원인을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비 증가를 가져왔다고 선동한 것도 반(反)이민 정서확대가 원인이 되었다(오정은 2014). 한국의 반(反)다문화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 저소득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어 내국인의 소득 수준을 낮춘다고 본다.

1974년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새로운 노동이민을 금지하고 프랑스를 떠나는 이민자에게 귀국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젊은 시절은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좌파로 전향하여 이주민의 고용상태와는 무관하게 10년 유효기간의 체류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였다. 미테랑 대통령의 정책에 힘을 얻어 이주민들은 반인종주의 운동협의체인 ‘아랍계 프랑스인들의 운동’의 주도로 ‘공화주의적 평등에 기초한 통합’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주민들의 조직화 현상은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와 달리 다시 극우세력에 의해 이민문제를 정치도구화 하였고 다시 인종주의적 태도를 부각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했다(엄한진 2017).

프랑스 이민자 통합 정책은 자유주의의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강조한 자유주의는 이민에 대한 유럽국가의 태도가 동화에서 통합으로 변화하고 반(反)차별주의를 부각시켰다. 다른 해석으로는 최근의 통합정책에서 드러나는 권력과 규율이 강조되는 푸코적 학술전통에서 영향 받은 ‘통치성’이라는 개념의 신자유주의의 관점이다(김현주 2015). 통치성의 관점은 세계화로 국가가 상당부분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컨트롤과워를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주권국가로서 통치력을 발휘하여 이민자들을 통합하고 사회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관점이다.

프랑스 정부는 전통적 학교 교육의 목표인 ‘프랑스 공화국 시민의 가치 함양’ 원칙에 충실한 강력한 통합주의를 표방하고 이 원칙에 따라 학교는 ‘공동적인 프랑스 문화’를 지닌 프랑스 시민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경수 2011). 프랑스의 다문화교육

은 프랑스의 우월함으로 ‘우리 프랑스 시민’이 되어 함께 가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를 시민 윤리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동화와 다문화의 딜레마’를 초극할 수 있는 대안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시민적 자세를 가질 때 다문화의 시민 윤리 실현의 토대를 갖추고 다문화시민의 윤리가 정착될 것이다(장정애 2008).

다문화관련 정책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집단에 대한 수용과 통치 형태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항하는 집단’은 집권 정권에 불만을 표출하는 세력이었을 것이고 이들은 야권(野圈)이고 좌파(左派)를 상징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다문화정책은 자유주의의 두 가지 해석과 같이 공존과 안보의 이분화된 정치세력에 편승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다문화인들의 편견, 차별 방지라는 문제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다시 말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치자들이 객관적인 관중으로서의 차별한 성찰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V. 맺음말

중요범죄는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개인과 사회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한다. 중요범죄의 대응방법은 범죄자와 범죄 집단을 향한 또 다른 보복을 하거나 내부의 완전 무장을 선택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며 피해자가 행할 수 있는 보복은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갖는다. 이러한 방법은 중요 범죄가 발생한 후의 선택이다. 우리는 중요범죄가 발생하기 전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중요범죄의 원인 중 이민자 2, 3세가 받았던 사회적, 경제적 소외가 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이들은 빈곤과 저학력, 인종 차별을 경험하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다.

한국은 다문화인구가 주민등록인구 대비 3.4%를 넘고 서울 영등포구와 안산시는 13%를 선회하는 것에서 보다시피 일부 지역이 계토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부적응이 일반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져 사회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요범죄를 일으킨 테러리스트의 대부분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으로 이는 이슬람포비아 현상을 유발하여 종교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주었고 최근 발생한 예멘 난민 사태에서 말해주듯 이슬람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강하게 드러났다.

중동·아랍 사람들은 한국 가전,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찾고,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지극히 보통의 이민자들인 점을 한국 사회가 인지해야하며, 이슬람을 종교적 문제로만 보는 지나친 편견을 버리고 이들을 친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서울신문 11/04/08). K-POP과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을 원하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것은 무지로 인한 집단 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이민자와의 공존은 필연적이다. 다문화 정책과 이민 정책은 정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집권 정권의 성향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기도 한다. 이민 사회 통합을 위해 이러한 변화에 요동치지 않는 시민의 보편적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베넷(Bunnett)의 다문화교육 핵심가치 네 가지 요소 중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은 이민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향후 다문화교육은 민족국가를 초월한 '탈민족적 시민권(postnational citizenship)' 개념으로 확장하고 다문화교육의 가치 전달과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문화인권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은 개인의 성장과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타자(他者)는 경쟁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타자(他者)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이 될 것이라 믿게 한다.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의 다문화교육은 경쟁중심의 교육 현실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기술을 제공하여 타자(他者)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중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증오범죄에 관한 사례 수집을 선행연구와 언론에 노출된 기사를 중심으로 수집하였고 범죄가해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 부족하여 선행 연구 결과에서 유추하여 작성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성과와 대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의 특성상 객관적 효과 분석이 어려워 이론적 고찰에 그친 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해 나아가기로 한다. 향후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다문화교육의 실천적 연구의 진행으로 이민배경 2, 3세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 강현민 · 정상우. 2015. 다문화인권교육의 개념 정립과 발전방향 소고. 법과 인권연구 8(3).
- 구춘권. 2005. 메가테러리즘의 등장배경과 원인: 지구화의 충격과 이슬람 근본주의의 부상. 국제·지역연구 14(1), 109-138.
- 김수경. 2015. 이주민의 인권과 국가 안보-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통권 26.
- 김수원. 2009. 사회적 차별, 혐오범죄(Hate crime), 그리고 인권. 원광법학 25(3).
- 김용대. 2004. 폭력과 인권-소렐, 아렌트, 벤야민에서의 폭력의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4(1), 91-108.
- 김진희. 2014.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국제 갈등 이슈와 다문화교육의 방향성찰. 다문화교육연구 7(1), 01-129.
- 김현덕. 2011. 9.11 사건 이후 국제이해교육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국제이해교육연구 6(2), 31-56.
- 김현주. 2015. 1990년대 이후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변화. 프랑스 문화연구 31, 441-468.
- 김혜정 · 권주혁. 2013. 증오범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고찰. 영남법학 36.
- 나달숙. 2015. 다문화인권교육의 이해와 실천방향. 법과인권교육연구 7(2).
- _____. 2017. 다문화 인권교육의 정립과 실천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0(3).
- 박단. 2015. 샬리 엠도 사건과 프랑스 내 소수자들-무슬림, 유대인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 HOMO-MIGRANS 13, 83-102.
- 박순진. 2003.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2014.07.
- 양문승 · 이훈재. 2008.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원광법학 24(4), 167-199.
- 엄한진. 2017. 프랑스의 이민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 오정은. 2014. 유럽의 반이민 정서 확산과 극우정당. IOM이민정책연구원위킹페이퍼.
- 윤민우. 2016. 2015 파리테러 이후 독일에서의 최근 테러리즘 동향과 테러대응의 변화, 경찰학논총 11(4).
- 이기라 · 양창렬. 2007. 공존의 기술. 그린비, 19-68.

- 이상애 · 이혜원. 2009. 가출청소년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16, 1-29.
- 이선엽. 2010. 문명의 충돌과 테러리즘의 기원 : 문명 간의 대화. 한국테러학회보 3(2).
- 이정주. 2013. 증오범죄의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다문화사회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4(2), 247-270.
- 장정애. 2008. 세계화 시대의 국제 협력과 다문화의 시민 윤리-프랑스 문화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2(4), 148-169.
- 전제철. 2011. 시민사회에서의 다문화인권교육연구. 시민교육연구 43(3).
- 정도희. 2017. 다문화사회 갈등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입법 검토. 홍익법학 17(4).
- 정명진. 2012. 학교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상우. 2017. 다문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과 인권교육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 최인숙. 2016. IS, 왜 프랑스에 분노하였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62, 299-315.
- Christine I. Bennett. 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 Hunt Lynn. 2009. Inventin human rights. 인권의 발명. 파주: 돌베개.
- James B. Jacobs and Kimberly A Potter. 1997. Hate Crimes: A Critical Perspective. Crime and Justice 22.
- M. G. Herek et al. 1997. Hate Crimes Victimization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Prevalence, Psychological Correlates,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Interpersonal Volence 12(2), 195-215.
- Michael Welch 2011. 9.11의 희생양 - 테러와의 전쟁에서 증오범죄와 국가범죄. 갈무리.

- 교육부 www.moe.go.kr
- 서울신문 www.seoul.co.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프레시안 www.pressian.com
-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 투고일: 2019.07.19. ● 심사일: 2019.07.26. ● 게재확정일: 2019.08.11.

Countermeasures of Hate Crime Cases through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Focused on Hate Crime Cases in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French Immigrants

Jung Eunjeong (Dong-A University)

Kim Daejung (Dong-A University)

This paper is to find the implications and preventions of hate crimes from the example of the recent European case especially with immigrant society and its notable hate crimes including terrorism in Banlieues, France in 2005. This paper suggest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for prevention of hate crimes. The hate crimes by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from French immigrant backgrounds revealed several issues of multiculturalism policy in France. Korean society should also consider this and try to prevent the similar result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French multiculturalism based on equality has converted immigrants into the underprivileged, and the majority of the criminals are muslims created 'Islamophobia' immigration issues. Multicultural policy and education to pursue genuine social integration with immigrants and crime prevention should develop into human rights education for citizenship. Then they are able to think outside the box and possess the post-racial citizenship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universal human rights' by Bennet, which can make them grow up into a member of society and prevent hate crimes.

<Key words> hate crime,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multiculturalism policy, human rights, discrimination and prejudice